

POLITICS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의견 수렴 TF 구성”



광주평화열차 내달 19일 운행
효천역 출발~파주 DMZ구간

광주시는 오는 9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행하는 광주평화열차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싣고 효천역을 출발해 파주 비무장지대(DMZ)로 향한다. 광주시는 평화열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열차 이동 중에는 달리는 음악다방, 추억의 간식 쿼츠, 통일강연·연극·공연 등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비무장지대 현장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민주·평화 정신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열차에는 총 300명의 시민이 탑승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25일부터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 원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평화열차는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담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특별한 여정”으로 “광주평화열차가 남북평화기반 구축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청소년 조리경연 참가 모집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청소년 대상 요리 경연대회인 ‘남도미레시피-청소년 조리경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도미레시피-청소년 조리경연은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서 ‘청춘의 열정, 남도의 맛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남도의 식재료를 활용하고 조리법을 접목해 창의적 요리를 뽐내며 남도 식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조형하는 자리아자 조리 분야에 꿈을 가진 고등학생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전남도,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은 개인이나 1인 1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선에선 서류 심사를 통해 15팀 내외를 선발하고, 본선은 오는 10월 15일 박람회장 미식이벤트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선 심사는 창의성, 조리기술 숙련도, 지역 식재료 표현력, 맛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우수 5팀엔 시상금과 함께 전남도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남도의 식재료를 청소년이 펼치는 이번 조리 경연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남도 미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꿈을 실현하는 특별한 경험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미래 셰프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expo-namdonice.com) 커뮤니티 게시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TF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 설치...매뉴얼 마련”
재계, 보완 촉구 vs 노동계 ‘누구나 교섭할 권리’ 환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형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노동부는 “변화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한 성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안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동당 양경수 위원장과 조함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은 열사가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면서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화순출신 양향자 선출

당 대표는 김문수·장동혁 내일 결선 투표

국민의힘 대표직을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오는 26일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최고위원에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장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이날 본경선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국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합산으로 처리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양향자 후보는 10만3957표를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신동욱 후보는 17만2341표, 김민수 후보 15만4940표, 김재원 후보는 9만9751표를 각각 얻어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우재준 후보가 20만4627표를 얻어 20만740표를 얻은 손수조 후보를 제쳤다. 화순 출신의 양 전 의원은 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제대로 정밀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선한 내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가 잘 모시겠다. 화순 출신 양향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지난 2016년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여성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어 양당의 최고위원에 모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른바 ‘삼성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자 한때 ‘문재인 키즈’로 불린 민주당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민 목소리 반영해 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내달 5일까지 응급실서 정책 신뢰도·개선점 등 만족도 조사

전남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응급실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관리토록 하기 위해 9월 5일까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38개소 응급실 이용객을 대상으로 2025년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 전남도 차원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응급실 이용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2026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 응급의료 서비스를 높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응급의료기관 38개소를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진료 환경 개선 △응급환자 안전 강화 △응급의료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해 도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38개소 52억원) △타터헬기 운용(44억원) △취약지 간소이력 파견(7명 4억원) △달빛어린이병원(4개소 6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모야 응급실이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치유의 공간으로

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발표

소비쿠폰 지급·경제활력 집중
농지 규제 완화 등 ‘민생 회복’

일자리·농해수산·관광 등
6대 분야 40건 누리집 공개

전남도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0건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0건은 신규 도입 정책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서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원(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용 해조류 안전성 검사비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된다. 전남으로 이전한 벤처기업은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남형 청년사관학교’를 통해 창업 청년 150명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돼 11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권인이 지자체로 확대돼 민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도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며,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이 활성화된다.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도 영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의 미식산업 국제행사로 열린다. 또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이 모바일로 제공되며, 회당 5만원, 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돼 창업이 한층 쉬워진다. 복지·인구·여성 분야에서는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이 지급된다. AI와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2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맞춤형 가정을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신규 시행된다.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와 입양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대비 마을순찰대가 도입돼 주민 스스로 재난 위험에 대응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 상향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매월 6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 완도에서 여수산권 첫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도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